

청문 정국 돌입...조국 놓고 “절대 사수” VS “반드시 낙마”

이번주부터 장관·장관급 후보자 7명 인사청문회
29일 농림장관·금융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 시작
與 “합의 안되면 27일 조국 국민청문회” 野 “3일간 청문회”

8·9 개각에 따른 7명의 장관 및 장관급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이번 주부터 개최된다.

25일 국회에 따르면 7명의 후보자 중 5명의 청문회 일정이 확정됐거나 잠정적으로 정해졌다. 가장 먼저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와 은성수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오는 29일 국회 검증대에 오른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와 이정숙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는 오는 30일,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는 다음 달 2일 각각 열릴 예정이다. 다만 이번 청문회 정국의 ‘핵’인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조성숙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의 청문회 날짜는 미정 상태다.

청문회 개최가 임박하면서 정국의 긴장감은 최고조로 치달고 있다. 조국 후보자의 적격성 여부와 거취 문제를 놓고 여야가 극한 충돌 양상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줄줄이 이어지는 또 다른 후보자의 청문회에서 어떤 돌발 변수가 튀어나올지 좀처럼 예측하기 쉽지 않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조 후보자를 포함한 후보자 전원에게 ‘무사 통과’를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권은 ‘조국 낙마’에 사활을 건 모습이다. 다른 후보자들에 대해서도 정밀 검증을 통해 부적격 여부를 철저히 가려내려는 방침이다.

이번 청문 정국의 하이라이트는 단연 조 후보자다. 조 후보자가 문재인 정부의 개혁을 상징하는 만큼 여당은 ‘절대 사수’, 야당은 ‘절대 낙마’를 고수하며 사활을 건 한판 승부에 나섰다. 당장 여야가 조 후보자의 청문 일정을 놓고 첨예하게 대치하는 것도 궤를 같이한다.

민주당은 ‘8월 내 조국 청문회 개최’를 성사시키기 위해 한국당을 전방위로 압박하고 있다. 오는 26일을 청문회 일정 합의 시한으로 못박는가 하면 합의 불발 시 ‘27일 국민 청문회’ 카드를 꺼내 들었다. 조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어떤 형태로든 규명해 적격성 여부를 가리되, 인사청문회법 규정에 따라 9월 2일 이전에는 모든 청문 절차를 끝내야 한다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한국당은 추석까지 상황을 끌고 가려는 생각이 있다”면서 “이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지도부의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청문 일정을 잡기 위해 한국당과 접촉을 이어가는 동시에 만일의 경우 국민 청문회 개최를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 지난 23일 한국기자협회와 방송기자연합회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국민 청문회 주관 요청의 건’ 공문을 발송했으며, 두 단체가 고사할 경우의 대안도 고민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당은 조 후보자 청문회 날짜로 9월

2~3일 전후를 언급하고 있다. 또한 하루가 아닌 3일간의 청문회를 고집한다. 역대 인사청문 대상자 중 이렇게 검증할 의혹이 많은 후보자가 없었다는 논리다.

민주당의 ‘국민 청문회’ 카드에 대해서는 ‘조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려는 꼼수’라며 여론전에 뛰어든 상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한국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청문회 증인과 참고인 출석 요구는 청문회 당일로부터 5일 전에 송달하게 돼 있다”며 “이제 8월 청문회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7개 청문회를 5일(8월 29일~9월 2일) 안에 모두 끝내겠다는 것은 국민을 무시하는 것”이라며 “국민에게 후보자가 어떤 사람인지 충실하게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나아가 한국당은 전날 광화문 장외집회 등에서 조 후보자에 부정적 국민여론을 생생히 확인했다며 ‘조국 때리기’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조 후보자 딸의 입사·사모펀드 투자·사학재단과 관련한 의혹의 퍼즐을 이번 주중 모두 맞춰 청문회 전 ‘완성된 그림’을 내놓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민주당은 나머지 6명의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에서도 적격성을 입증하는 데 전력을 다하겠다는 방침이다. 한국당도 6명에 대한 철저한 자질 검증을 베풀고 있다.

한국당 한 의원은 “조 후보자에 가려 문제점이 외부로 드러나지 않은 후보자들도 많다”며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의 경우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6명 후보자를 놓고도 여야간 ‘칼과 방패의 대결’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연합뉴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일요일인 25일 서울 중로구 적선현대빌딩에 꾸러진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靑, 한일 갈등에 강공법...조국 논란도 정면돌파

독도방어훈련하며 對日 메시지
조국 의혹, 청문회에서 해명 가능

한일관계 악화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논란 등 양대 이슈가 정국을 뒤흔들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 내부에서 두 사안 모두에 대해 원칙론을 앞세운 정면돌파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우선 한일갈등의 경우 정부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를 선언한 지 사흘만인 25일 독도 방어훈련을 실시하는 등 연이어 ‘대일(對日) 강경 시그널’을 보내고 있다. 일본이 한국의 외교적 노력을 무시하는 상황에서 더 이상의 로우키 대응은 사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청와대의 상황인식인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조 후보자를 겨냥한 각종 의혹제기 및 야권의 사퇴 공세에 대해서도 ‘우선 청문회를 열어 후보자 본인의 해명을 들어야 한다’고 맞받아치고 있다.

◇ 대일 강경대응 기조...“안보 공백 없다”=일본에 대한 강경대응 의지는 굳이 이날 오전부터 ‘동해 영토수호 훈련’이라는 이름으로 독도방어훈련을 전격 시작했다. 데에서 고스란히 드러난다. 그동안 일각에서는 28일 일본이 한국을 수출 절차 간소화 혜택 대상인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 명단에서 제외하는 조치가 실제로 시행하는지 지켜본 뒤 훈련 여

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다. 하지만 이런 예상을 깨고서 굳은 이날 훈련에 돌입했고, 한국 정부로서는 사흘 전 지소미아 종료 선언에 이어 연달아 일본을 압박하는 모양새가 됐다.

여기에는 그동안 한국의 외교적 노력에도 일본이 한국에 대한 경제보복 수위를 누그러뜨릴 조짐을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이는 ‘유연한 대처’로 일관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협상의지만 계속 부각할 경우 일본의 페이스에 끌려나갈 위험이 있으며, 오히려 강경 대응하는 것이 외교적 해결의 지름길이라는 판단인 셈이다.

실제로 정부 고위관계자는 지소미아 파기 배경과 관련해 “우리가 협정을 연장하더라도 일본은 결국 28일에 백색국가 명단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조치를 시행할 것으로 봤다”며 “더 지난 후에는 일본이 일반적으로 지소미아를 파기할 가능성이 있었다. 우리가 협정을 연장해 놓고 일본이 협정을 파기한다면 ‘바보’가 되는 꼴”이라고 말했다.

◇ 조국 논란도 정면돌파 기류...“청문회 통해 해명 들어야”=한일갈등이 외교·안보 분야의 당면 과제라면 국내 이슈들 가운데서는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이 가장 뜨거운 현안으로 꼽힌다. 조 후보자에 대한 여론 악화가 정권 전체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지적과 함께, 일부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명절

회나 조 후보자의 자진사퇴 가능성도 배제할 수만은 없다는 애기도 조심스레 흘러나온다.

실제로 한국리서치가 KBS ‘일요진단 라이브’ 의뢰로 지난 22~23일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1천15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한 결과 조 후보자가 장관직 수행에 적합하지 않은 인사라는 응답은 48%를 기록했다. 이는 “적합한 인사”라는 응답(18%)을 크게 상회하는 것으로, 비판 여론이 거세지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청와대 관계자는 “청문회를 열고 후보자 본인의 해명을 듣는 것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후보자 본인의 해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의혹 제기만으로 거취를 논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청와대의 이런 태도에는 지금 불거진 의혹 가운데 부풀려진 사안들이 많으며, 청문회에서 소명을 거칠 경우 비판 여론도 누그러질 것이라는 분석이 담긴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조 후보자가 자칭 낙마할 경우 집권중단 국정운영도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위기 의식 역시 엿보인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여기서 밀리면 검찰개혁 이슈를 넘어 각종 국정과제를 실현할 동력이 크게 약화할 우려가 있다”며 “청문회를 통해 어떻게든 논란을 정면 돌파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조국 “아이 문제에 안이한 아버지였다...국민들께 송구”

“청년들에 마음의 상처 안겨”

조국(54)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딸의 고교 시절 논문 제1저자 등재 등 자녀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아이 문제에 불철저하고 안이한 아버지였다”고 사과했다.

조 후보자는 25일 오전 10시 45분께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에 꾸러진 중로구 적선현대빌딩에 출근해 “개혁주의자가 되

기 위해 노력했지만 아이 문제에는 불철저하고 안이한 아버지였음을 겸허히 고백한다”며 “당시 존재했던 법과 제도를 따랐다고 하더라도 그 제도에 접근할 수 없었던 많은 국민들과 청년들에게 마음의 상처를 주고 말았다”고 밝혔다.

이어 “기존의 법과 제도에 따르는 것이 기득권 유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간과했다”며 “국민 여러분께 참으로 송구하

다”고 말했다. 조 후보자가 ‘송구하다’는 표현을 쓰며 명시적으로 사과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는 “저의 불찰로 지금 많은 국민들에게 꾸지람을 듣고 있고, 제 인생 전반을 돌아보고 있다”며 “많은 국민들께서 제가 법무부 장관으로서 부족하다고 느끼시는 점을 뼈아프게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文대통령, 내달 1~6일 동남아 3국 순방

문재인 대통령은 다음 달 1일부터 6일까지 5박 6일간 태국·미얀마·라오스 등 동남아 3개국 순방에 나선다고 청와대가 25일 발표했다. 태국은 공식방문, 미얀마·라오스는 국민방문이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

은 취임 후 아세안 10개국을 모두 방문하게 된다.

문 대통령은 취임 첫해인 2017년 11월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의 참석차 필리핀을 방문해 ‘평화를 위한 공동체’라는 한-아세안

미래공동체 구상을 밝히면서 임기 내에 아세안 10개국을 모두 방문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이 임기가 절반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아세안 10개국 방문을 마무리하는 것은 11월 부산에서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와 제1차 한-미중 정상회의를 앞두고 있어서다. /연합뉴스

광주보청기 난청센터

보청기

무료체험·출장

직접 체험 후 결정!!

✓ **잡음없이 깨끗한 소리**

✓ **윙윙~ 울리지 않는 보청기**

062)362-3336

광주 돌고개 2번출구 대형약국 3층

모던 슬라브옥상 칼라강판 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옥상지붕공사

옥탑이 없는 평 슬라브 주택 및 한옥 등은 칼라강판 지붕공사

옥상 스틸방수

갈라지고 물이 새는 옥상바닥 겨울의 차가운 냉기! 여름의 뜨거운 열기! 방수와 단열 한번에 해결!

스틸방수시공모습

철제시공모습

옥상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무료견적

디자인 등록 제 30-0934833호 제 30-0949873호 특허청

모던건설 (트윈스틸) 시공문의 **062)531-3530 H.010-9229-3530**